

통합돌봄, 국비 지원 ‘썰غم’ 자체 부담 ↑… 재정악화 우려

정부, 3월부터 전국 시행… 인력의 44% 한정 지원
도, 정부 산정안 62명보다 많은 공무원 91명 증원
5년간 295억 필요한데 정부는 27명 6개월치만 지원

정부의 통합돌봄 전국 확대 정책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3월부터 복지 분야 공무원을 91명 증원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중 30%에 해당하는 27명의 인건비로 6개월치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지난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재정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5급 2명, 6급 이하 89명 등 총 91명이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의료·요양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 3월 27일부터는 전국에서 의무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무원 91명을 증원하면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총 경비로 295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합돌봄은 국책 사업이지만, 국비 지원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증원해야 할 공무원 규모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산정한 뒤 이 중 44%에 해당하는 인력의 6개월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산정한 제주지역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은 62명이다. 그러나 도는 각 지역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면 91명이 필요하다고 이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다.

국비는 정부 산정 기준대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제주에는 91명 가운데

27명의 6개월치 인건비만 지원 받는 상황에 놓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안그래도 올해 지방채를 4820억원 발행한 것에 대해 도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통합돌봄 공무원 증원 예산까지 부담해야 하니 (재정 여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예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국책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전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양 행정시 사회복지 예산도 전체의 4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면 재정 여력이 없어) 기간 산업과 생활SOC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양기철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우리가 보기에 도 국비 지원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공항 결항 속출 제주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린 8일 제주공항 운항 안내판에 결항편들이 안내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강희만기자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가격 하락’ 제주산 월동채소 유통대책 마련 당근 3000t 수매 후 출하 정지 ‘초강수’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근 등 제주산 월동채소 수급처리 대책이 마련됐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회장 강동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센터장 고광덕)는 품목별 TF팀 회의를 개최, 2025년산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등 제주산 월동채소에 대해 품목별 등급에 따른 유통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2025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조사결과 1만1799ha, 생산량은 58만 392t으로 전년 대비 재배면적은 13.7%, 생산량은 3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35% 정도 가격이 떨어진 당근은 재배면적이 1851ha로, 전년(1476ha) 대비 25.4% 증가했고 이에 생산량은 5년 평균 생산량보다 5000t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3월 이후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월동채소 품목별로 상·중·하품별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상품은 도매 시장 출하를 유도해 경매가를 안정화시키고 중품은 식자재업체나 가공업체 출하, 하품은 농가 자율적으로 시장가격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월동무는 주산지협의회 개최를 통해 정부 비축사업을 포함한

출하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당근은 크기가 큰 특정 규격에 대해 3000t을 수매한 후 자율적 출하 정지를 추진한다. 당근의 경우 지난 12월 200ha 1차 시장격리제에 이어 이달 말까지 2차 시장격리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지 홍보·광고를 더욱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체 판촉행사도 적극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강동만 회장은 “최근 일부 품목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주산 월동채소 소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설맛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도, 동문시장 등 8곳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수산물 구매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설 연휴 전인 10일부터 14일까

지 진행된다. 이 기간 국산·원양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가공품 포함)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행사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을

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총 8곳에서 이뤄진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다만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선희기자

제주섬 최강 한파로 ‘공공’… 4면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33만원… 5면

도, 올해 전기차 6351대 민간 보급 계획

제주도는 10일부터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올해 목표한 전기차 보급 대수는 승용 4998대, 화물 1337대, 승합 16대 등 총 6351대로 이중 4000대를

상반기에 보급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0일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와 동시에 신청을 접수한다.

도는 차상위 등 취약계층, 다자

녀, 장애인 및 소상공인, 1차산업 대상자에게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V2G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경우와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100년을 향한 약속”

100년을 향한 한라산의 약속, 제주와 함께합니다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마음,
제주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라산은 늘 제주와 함께해 왔습니다

장학사업과 지역 상생,
지역사회에 전하는 다양한 나눔으로
누적 86억 원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품질로,
제주의 가치를 이어갑니다

한 잔의 술을 넘어,
제주의 내일과 함께 건넌습니다

SINCE 1950

제주의 내일, 희망과 함께 합니다.

(주)한라산은 100% 순수향토기업으로서 매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제주지역에 환원합니다

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구자현

▶ 한라산소주 제주지역 누적 기부금 86억원

장학금 / 인재 육성 / 지역사회 / 지역복지 / 환경 / 지역경제 활성화 등